생산일 : 00. 9.19

報 道 資 料

이 자료는 2000년 9월 23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공적자금 백서」 발간

주요내용

□ 정부는 공적자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의 조성·운용 및 회수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였음

○ 정부는 공적자금에 관한 궁금증이 쉽게 풀릴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음

- 공적자금의 지원을 연대기 형식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이외에도 금융권별, 지원주체별로 공적자금 지원내역을 밝히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였음

- 또한, 공적자금 관련기관(금감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의 주요 의결사항과 일지를 첨부하였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참고'를 통하여 설명하였음

- 연구기관의 자료, 외국의 사례 등을 최대한 인용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정부는 공적자금 백서 발간을 계기로 향후의 공적자금 운용이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1년 단위로 백서를 발간할 예정임

<별첨> 공적자금 백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보도자료 생산과 :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500-5341)

재정경제부 공보관

48

Ⅰ. 백서의 구성

□ 백서는 "공적자금의 조성, 지원 및 회수, 성과와 평가"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분량은 약 530여 페이지임

○ 제1장에서는 **공적자금의 조성배경과 조성내역**을 설명

- 97년말 우리 경제의 모습과 위기발생의 원인을 서술한 후 금융구조개혁의 원칙, 체계 등을 설명하고 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
- 부실채권정리,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목적별로 공적자금 조성내역을 설명

○ 제2장에서는 **공적자금의 지원 및 회수현황·전망**을 설명

- 공적자금의 개념을 정의한 후 공적자금의 지원원칙과 의사결정체계를 서술하고, 시기별·금융권별·자금지원주체별 공적자금 지원내역을 상세히 설명
  - ·시기별 지원내역에서는 "외환위기 직후의 초기 구조조정 시기, 1998년 4월 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 시기, 대우그룹의 기업개선작업 이후의 구조조정 시기"로 나누어 기술
  - ·금융권별 지원내역에서는 "은행, 종금, 증권, 투신, 보험, 금고, 신협"으로 나누어 설명
  - ·지원주체별 지원내역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부"로 나누어 다시 설명
- **공적자금 회수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회수전망**을 언급

○ 제3장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

-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인하여 우리 금융부문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중간단계에서의 평가를 기술
-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내용을 제시

○ 부록에서는 세부적인 공적자금 지원내역, 외국의 사례, 관련기관의 주요 의결사항, 공적자금 관련 통계를 수록

- 공적자금 지원 일지와 기금별,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내역을 재정리하고 주요국의 부실금융기관 처리시 재정지원 현황을 설명

- 금감위·예보·자산관리공사의 주요 의결사항을 첨부하고 공적자금 관련 각종 통계를 2000년 8월말 기준으로 정리

□ 백서의 이용방법

○ 백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사건을 보고 싶은 경우에는 연대기 방식으로 서술한 '제2장 Ⅰ-4. 시기별 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사용내역'(p.)을 찾아보면 되고,

○ 금융권별로 종합된 내용을 보고 싶거나, 자금지원주체별로 지원된 내용을 보고 싶은 경우에는 '제2장 Ⅰ-5. 금융권별 구조조정 추진과 공적자금 지원내역'(p.) 또는 '제2장 Ⅰ-6. 자금지원주체별 공적자금 지원현황'(p.)을 찾아보면 됨

○ 또한, 주요 단어와 관련된 사항을 알고 싶을 경우 '색인'(p.)을 찾아볼 경우 신속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위원회의 세부 의결내용이 요약되어 첨부되어 있고, 상세한 통계자료가 다양한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세부지원내역까지 파악이 가능

Ⅱ. 백서의 주요 내용

1. 공적자금의 정의(p.51)

□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 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함

○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됨

○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임(IMF기준)

□ 편의상 공적자금과 구별하여 지칭하고 있는 "공공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지원된 자금중 64조원의 공적자금이외의 다른 자금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 IBRD, ADB로부터의 차관자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에 현물출자한 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융기관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자금,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금, 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차입한 자금을 포함

○ 동 자금은 64조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되거나 법률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원된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국회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된 것임

2.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p.31)

□ 예금자 보호

○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은 도산하지 않도록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예금을 보호하는 한편

○ 객관적인 경영평가 결과 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을 시키는 대신에 공적자금을 통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됨

- IMF위기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되었더라도 안심하고 금융기관에 예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적자금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큼

□ 금융중개기능의 회복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

○ 금융기관이 부실해져서 도산하게 되면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어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체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될 수 밖에 없음

○ 금융기관을 건실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외부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고 최소화하고자 공적자금을 지원하였고 그 혜택은 전국민이 누리는 것임

□ 금융기관 스스로의 자금조달 곤란

○ 금융기관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경제위기하에서는 자산가격과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다른 금융기관, 기업, 외국자본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사실상 곤란

○ 재정이 대체로 흑자기조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을 통한 자금조달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것임

3. 공적자금과 금융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의 관계(p.21)

□ 공적자금이 금융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이유는 금융시스템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게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공적자금의 투입을 계기로 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인원·점포 감축을 유도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 회생가능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여신을 계속공급하는 조건으로 인력감축, 보유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의 노력을 부과하게 됨

⇒ 따라서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공적자금의 투입은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음

4.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p.52)

□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지원

○ 회생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 공적자금의 투입규모를 결정할 때는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부실규모를 실사하고 금융기관 스스로 부담가능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규모를 엄밀하게 산정

○ 해당 금융기관의 규모, 거래관계 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회수가능성이 높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자기책임의 원칙이 확립되도록 지원

○ 주주(감자), 경영진(교체), 종업원(인원감축, 임금삭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지원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검사를 통해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추궁

□ 국제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지원

○ 각국의 예를 감안하여 구조조정전문기구(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효율적 업무집행 도모

○ IMF, IBRD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의 자금지원 준거 정립 등

5. 공적자금의 지원근거와 지원관련 의사결정체계 (p.62)

□ 공적자금의 조성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정부보증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거쳐 조성

□ 공적자금의 지원근거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임

○ 세부관련조문은 백서책자 참조

□ 공적자금의 조성과 전반적인 관리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나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투입결정과 집행은 금융감독위원회, 자산관리공사(경영관리위원회), 예보(운영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6.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내역(p.38)

□ 98.5월 공적자금 조성당시 98.3월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파악

○ 고정이하(6개월이상 연체)여신은 68조원이며, 향후 부실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여신(당시 3개월이상 연체) 50조원까지 포함한 불건전여신을 총 **118조원***으로 추정

* 실제 확정치는 112조원 수준

○ 향후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해 부실채권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의 규모를 **100조원**으로 예상

○ 부실채권 매입소요: **25조원**

- 100조원의 부실채권중 손실분담차원에서 금융기관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자산관리공사에서 반값수준에서 매입정리한다고 가정

○ 증자소요: **16조원**

- 100조원의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각손 50조원에서 대손충당금 기적립액 15조원을 차감한 35조원의 순손실에 대한 증자와 BIS비율 8%미만 은행의 추가증자소요 4조원을 합한 39조원을 총증자소요액으로 추정

- 손실분담차원에서 증자소요의 50%는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나머지 **19조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
  · 단, 이미 98.1월에 제일·서울은행에 3조원을 출자하였으므로 신규증자지원소요는 **16조원**으로 함

○ 예금대지급 소요: **9조원**

- 정리중인 종금사, 향후 정리가 예상되는 금고, 신협, 증권사의 예금대지급소요를 전망

○ 이에 따라 **총 50조원**의 자금을 추가조성하기로 결정

⇒ 98.5월현재 정부보증을 받아 기사용했던 14조원*의 자금과 합하여 **총 64조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됨(*예금보험기금 6.5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 7.5조원)

· 예금보험기금 : 31.5조원 ⟶ 43.5조원
· 부실채권정리기금: 32.5조원 ↑ 20.5조원
12조원이관(99.8월, 국회변경동의)

7. 공적자금 지원내역(p.65)

가. 총 괄

□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을 통한 공적자금은 채권발행시한인 99년 말까지 전액 사용

○ 이중 25.3조원을 회수하여 **약 18.6조원**을 재사용

○ 용도별로 보면 증자에 24조원, 예금대지급 등에 24조원, 예보를 통한 자산매입 등에 4조원을 사용하고, 부실채권 정리에 30조원을 사용(회수재원 활용분 포함)

*** 공적자금 사용실적(회수분 재사용 포함)**

(단위: 조원)

구 분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 정리기금	합 계
조 성	43.5					20.5	64.0
지원실적(A)	증자	출연·예금대지급	자산매입	기타	계	20.5	64.0
	20.5	21.0	1.8	0.2	43.5		
은 행	16.5	9.6	1.8	0.0	27.9	17.3	45.2
제2금융권	4.0	11.4	0.0	0.2	15.6	3.2	18.8
회수재원(2000.8말)	7.5					17.9	25.3
재사용실적	3.0	4.2	1.9	-	9.1*	9.5	18.6

* 예금보험공사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2조원을 차입

□ 이밖에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27조원 규모의 공공자금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를 위해 지원됨

○ 이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총 투입된 자금은 2000년 8월말 기준으로 110조원

□ 시기별 공적자금 지원내역은 백서(pp.76~179)를 참조하시기 바람

나.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 내역

□ 은행(p.182)

○ 33개 은행이 5개은행 퇴출, 합병에 따라 23개로 줄어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투입자금 109.6조원의 64%에 해당하는 70.3조원이 은행권에 투입되었음

- 주요 소요 내역을 보면, 출자에 29.1조원, 출연·자산매입에 20.1조원, 부실채권매입에 21.1조원이 지원되었음

□ 종금사(p.217)

○ 30개 종금사가 9개사(영업중인 종금사는 5개)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퇴출종금사에 대한 예금대지급 10.1조원, 부실채권 매입 1.6조원 등으로 11.9조원이 공적자금이 지원되었음

□ 투신사(p.228)

○ 대우그룹 기업개선작업의 영향으로 인하여 부실해진 투신사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출자지원 5.8조원, 부실채권 매입 6.4조원 등 총 12.2조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었음

□ 보험사(p.232)

○ 50개 보험사 중 인가취소, 합병등으로 13개사가 퇴출되는 과정에서 출자지원 6.8조원, 출연·자산매입 1.9조원, 부실채권 매입 1.8조원 등 총 10.5조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었음

□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p.234, p.235)

○ 231개의 금고와 1,666개의 신협은 각각 33.8%, 20.4%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예금대지급등으로 3.2조원, 1.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

다. 자금지원 주체별 공적자금 지원내역(p.236)

□ 자산관리공사

○ 정부보증채권 20.5조원과 회수자금 중 9.5조원 및 공공자금 1.1조원 등 31.1조원을 활용하여 금융기관 부실채권 75.7조원(계약액 기준)을 매입하였음

□ 예금보험공사

○ 정부보증채권 43.5조원과 회수자금중 9.1조원* 및 6.3조원의 공공자금 등 59조원을 활용하여 출자에 28.7조원, 출연·예금대지급에 26.3조원, 자산매입등에 4조원을 지원하였음

*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2조원으로 투신사의 출자한 자금을 포함

□ 정부

○ 10.2조원의 국유재산을 제일·서울은행, 한국·대한투신, 특수은행에 현물출자를 하였고,

- 총 4차례에 걸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하여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 6.4조원을 매입하였으며,

- 정부예산을 통하여 특수은행의 증자를 위하여 2.3조원을 사용하였음

* 이외에도 한국은행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증자(7천억원)가 있음

8. 공적자금 회수현황과 향후전망(p.248)

가. 공적자금 회수현황

□ 자산관리공사는 2000년 8월말 현재 매입부실채권 75.7조원(장부가기준)중 약 45%수준에 달하는 34.1조원을 국내외 매각 또는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 등을 통해 정리하여 17.9조원을 회수

○ 34.1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투입한 공적자금은 15.9조원이었기 때문에 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해 자산관리공사는 1.9조원의 매각이익을 거둠

□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8월말 현재 투입한 59조원의 공적자금 중 7.5조원을 회수하였는 데

○ 이는 예보의 투입자금 회수방법중 아직 보유주식의 매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원인*

* IMF와의 합의사항: 정부보유주식의 제값매각을 위해 정부출자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2년하반기이후부터 매각을 개시하기로 함

○ 예보는 공사내 채권회수전담조직의 설치, 파산재단의 감사위원참여 등을 통해 회수에 노력하는 한편

○ 정부도 2000년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예보의 자금회수기능을 강화

- 예보 직원이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경영관리인, 청산 또는 해산된 금융기관의 청산인·파산관재인의 역할을 수행
- 부실금융기관이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게을리 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예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신하여 행사

나. 향후 공적자금 회수전망

□ 공적자금은 잠재적 부실의 우려는 있으나 회수가능성이 있는 재원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실현된 비용(realized cost)은 아님**

○ 앞으로 부동산·부실채권·보유주식의 매각 및 구상권 행사등을 통해 투입자금회수가 가능

- 부실채권: 시가에 매입하였기 때문에 손실없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이 가능

  *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권부터 매각이 이루어짐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매각이 어려워지고 손실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자산유동화증권(ABS), Equity partnership,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등 다양한 부실채권 매각기법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

- 정부보유주식: 액면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지원액이상의 회수가 가능

  · 특히, 향후 클린화 과정을 거치고, 그동안의 조직 및 인력축소,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영업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 점진적으로 지분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예금대지급 자금: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폐쇄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의 차액만큼의 손실이 불가피

  · 다만, 이러한 손실은 앞서 설명한 대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주식의 매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축소될 수 있음

-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융자금액: 예산에서 출연되는 것이 아니라 "융자"되는 것으로서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가 상환부담을 지고 있음

  · 부실채권 및 보유주식 매각을 통해 원금이상을 회수함으로써 예금대지급으로 손실과 이자상환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최종비용을 최소화할 예정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후순위채 매입: 후순위채의 만기가 되면 후순위채를 발행한 금융기관(모두 은행임)에서 이를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는 한 회수에 큰 문제 없음

- 차관자금 출자금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은행, 투신)금액: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매각을 하게 되면 역시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음

9. 공적자금 상환일정(p.67,72)

□ 공적자금은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하였고 동 채권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이자가 융자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 채권의 만기(3~7년)나 이자 융자기한의 만기(3년)가 도래하게 되면 양 기관에서 채권을 상환하거나 융자지원 받은 이자를 재정에 갚아야 함

□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99년 6,287억원(기상환)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고 이자융자 상환은 2001년부터 도래함

○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2001년 1.5조원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고 이자융자 상황은 2001년부터 도래함

10.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p.263)

□ 신용경색해소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 자금중개기능 회복을 통한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

*** 기업자금조달 추이(증감, 조원)**

	97	98	99	2000상반기
은행대출(신탁포함)	17.9	-3.6	19.0	16.1
(중소기업)	4.2	-1.3	17.5	9.5
(대 기 업)	13.7	-2.3	1.5	6.6
회사채(순)	13.8	32.2	1.5	-9.5
주 식	3.1	13.5	41.0	8.2
CP(순)	9.8	16.6	-17.9	1.6

*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외환위기 직후 30%대까지 올랐던 금리도 98년 중순이후 외환시장의 안정과 금리인하 정책에 힘입어 99년 하반기에는 회사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수로 하락

○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로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물경제도 상승세로 반전

- 경제성장률 : △6.7%(98) → 10.7%(99) → 12.8(2000.1/4)
- 실업율 : 6.8(98) → 6.3(99) → 5.1(2000.1/4)

□ 국제신인도 회복

○ 국제신인도 : 외환위기 직후 "투자부적격" → "투자적격"

*** 국가신용등급 추이**

S&P	종전	97.10.24	11.25	12.11	12.23	98.2.17	99.1.25	11.11	
	AA-	A+	A-	BBB-	**B+**	BB+	BBB-	**BBB**	
Moody's	종전	97.11.28	12.11		12.21		99.2.12	12.16	
	A1	A3	Baa2		**Ba1**		Baa3	**Baa2**	
Fitch IBCA	종전	97.11.18	11.26	12.11	12.23	98.2.2	99.1.19	6.24	2000.3.30
	AA-	A+	A	BBB-	**B-**	BB+	BBB-	BBB	**BBB+**

□ 금융산업 체질 개선의 전기 마련

○ 97말이후 2000.7말까지 480개의 회생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을 인가취소·합병소멸·해산 등을 통해 정리

○ 구조조정결과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제고

* 금융기관의 인원감축 및 효율성 개선

	인원수(명)			1인당 자산(억원)*		
	97말	98말	증감	97말	98말	증감
일반은행	114,619	75,604	△34.0%	49	76	55.1%
종금사	1,922	1,628	△15.3%	-	-	-
증권사	27,232	22,355	△17.9%	-	-	-
투신사	6,230	5,004	△19.7%	13.9	39.2	182.0%
보험사	83,304	64,879	△22.1%	13.4	17.7	32.1%
리스사	2,172	1,080	△50.3%	-	-	-
신용금고	10,425	8,226	△21.1%	34.1	36.3	6.4%
신협	30,122	28,767	△4.5%	6.4	7.3	14.1%

* 투신사의 경우 1인당 수탁고(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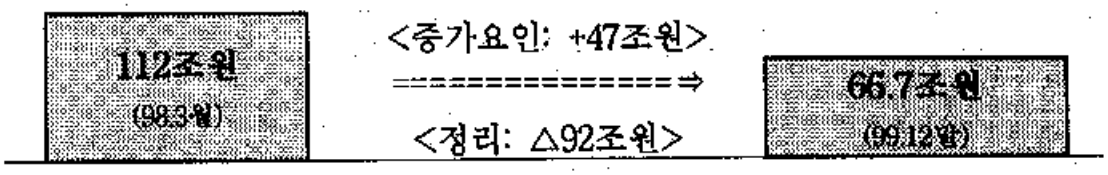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97년(A)	98년	99년(B)	증감(B-A)
1인당 예수금	3,163	3,862	4,996	1,833
점포당 예수금	68,927	81,558	82,713	13,786

□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 98.3말 국제기준에 의한 부실채권규모는 112조원이었으나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 금융기관 자체매각 등의 노력에 힘입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9말 66.7조원으로 축소되었음

*** 부실채권 추이**



○ 일반은행 BIS비율 제고 : 97말 7.04% → 99말 10.83%

*** BIS자기자본비율 추이**(단위:%)

구분	97말	98말	99.6말	99말
일반은행기준	7.04[1]	8.23[2]	9.84	10.83

1) 5개 퇴출은행, 강원·충북은행을 포함한 산술평균치임
2) 강원·충북은행을 포함한 산술평균치임

□ 도덕적해이 방지 및 시장규율의 정착에 기여

○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해 각 경제주체들이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특히 은행의 퇴출을 통해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 인식과 관행에 의한 도덕적 해이를 타파

○ 공적자금 지원시 자구노력, 손실분담원칙 적용, 부실책임 경영진 문책 등 엄격한 지원조건 견지

- 일반은행 총직원수 : 97년말 대비 99년말 34.4%(3만9천여명)감소
- 일반은행 자체 유상증자 실적 : 98~99년간 6.9조원
- 금융감독원과 예보의 부실책임 추궁

* 금감원 : 공적자금이 투입된 261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 규명검사를 실시하여 임직원 2,103명 문책, 불법행위자 1,009명 검찰고지 등

* 예보 : 202개 기관 2,094명에 대한 부실원인조사완료 → 파산관재인을 통해 721명에 대해 3,947억원 상당의 소송 제기중(1,397건 5,894억원의 가압류, 270건의 가처분 조치)

□ 대우그룹 문제의 처리

○ 금융권 총여신이 채권액신고기준으로 57조원에 달하는 대우그룹 문제를 해결

- 이과정에서 당초 64조원 조성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공적자금

의 투입이 이루어짐(약 21조원)

11.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최종 평가(p.295)

□ 공적자금의 투입은 우선, "얼마나 최소의 비용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느냐"와 자금이 지원된 후 "투입된 자금을 얼마나 회수하느냐"를 가지고 평가

○ 최소자금 투입의 원칙: 객관적이고 엄격한 절차에 따른 부실규모 실사,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실분담 적용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동 기준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

○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문제: 금융구조조정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회수된 공적자금까지 재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적자금의 투입에 따른 손실과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

- 공적자금 회수분의 대부분을 차지할 주식의 매각이 은행의 경영상태 및 주식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02년 하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는 주식의 매각이 이루어진 후에 공적자금의 투입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그 이전에는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함에 있어 발생하는 애로요인을 해결하고 양 기관에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공적자금을 회수해 나가는 것이 중요

12. 보완해야 할 문제점과 남아있는 과제(p.297)

가. 보완해야 할 문제점

□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발생, 부실채권 거래의 부진등으로 금융기관 스스로의 부실채권 처리에 한계

□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 추궁에 한계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이 다시 악화되는 사례 발생

□ 한아름종금, 정리금융공사 등 금융기관 정리체계가 복잡하고 다기화되어 정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곤란

나. 남아있는 과제

1) 제2단계 금융구조개혁의 마무리

□ 남아있는 부실의 효과적인 처리

- ○ 은행권에 대해서는 독자생존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거쳐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방식 등을 통해 정상화 추진
- ○ FLC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차질없이 추진
- ○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자금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기업자금사정 모니터링강화, 신용보증지원 확충, Primary CBO제도, 채권펀드 등을 통해 지원 강화

□ 부실을 예방하는 시스템의 구축

- ○ 부실예방차원의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
- ○ 기업구조개혁(워크아웃제도 보완, 기업지배구조 추가개선 검토,

시장원칙에 의한 기업구조개혁 방안 모색등)을 통한 부실의 예방

□ 미래지향적인 금융구조개혁의 추진

○ 은행소유 지분한도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 채권업무 취급기관 확대, 국채전용펀드 활용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등 채권시장 활성화

○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촉진

○ 사이버금융기관의 설립기준, 소비자보호 등 전자금융혁신을 촉진할 법과 제도를 정비

2) 공적자금의 회수에 전력

□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잠재부실요인을 자기책임하에 철저하게 인식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을 강화

○ 결합재무재표 결과를 FLC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시 자본적정성뿐만 아니라 자산건전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여 부실채권의 자율적 정리를 유도

○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손실을 일정기간에 걸쳐 이연상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 워크아웃여신 및 출자전환 주식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제도를 조속히 도입

□ 주식의 제값 매각을 위한 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

○ 은행권의 강도높은 클린화를 추진

○ 예금보험공사와 출자금융기관간에 체결한 출자약정서에 의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이 목표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고려요소(경영정상화정도, 대내외 신용평가등급, ROE 등)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지분의 가치상승을 적극 도모

3)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 금융감독원의 부실금융기관 조사결과와 예금보험공사의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지속 추진

□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채무기업주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간 협조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 금융감독원은 2000년 8월 44개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부당행위를 행한 기업·기업주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 앞으로도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검찰 등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기업주를 포함하는 방안과 정리금융기관과 거래한 채무기업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 내부자거래, 부실회계 등으로 인한 기업부실화 및 주주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방안도 강구할 계획

4) 적정 공적자금의 확보

□ 지난 5월 정부는 향후 추가투입규모를 30조원으로 추정하고 가능한 한 기투입 자금을 회수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 은행의 클린화, 종금사 정리 등 소요의 증가와 주식매각여건의 미성숙 등을 감안할 때 **수정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지난 8.23일 당정협의시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한다는 방침에 합의

○ 향후 공적자금 소요규모와 자체조달 규모에 근거하여 **공적자금 추가 조성규모를 산출**하고 **국회동의, 예산 반영** 등을 추진

□ **공적자금 추가조성의 사유**

○ 99년 하반기이후 대우그룹문제 등에 따라 발생한 **추가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거나 기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회수자금 활용**(recycling)방법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 공적자금의 소요를 제때에 맞출 수 없어 자금투입의 시기를 놓쳐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 재활용 재원의 조기확보를 위해 **보유재산의 매각을 서두르다보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이 낮은 주가수준이 지속되는 등 재산의 효율적인 매각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는 것이 공적자금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해 나갈 수 있으며,

- 추후 시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유재산을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공적자금의 cost를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됨

○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려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추가조성을 검토할 필요

- 또한, 시급한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의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금융시장의 요구**를 감안해야 함

- 특히, 공적자금회수의 원천인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시기를 2002년 하반기부터 개시하기로 함에 따라 2000~2001년 중에는 마땅한 자금회수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 충분한 공적자금의 여유(Buffer)가 없는 상황하에서는

- 추가조성없이 회수를 통해 수급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시장안정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

○ 따라서, **시장친화적 정책선택을 통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보유함으로써,**

- **구조개혁 마무리와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